

위법한 시행령 꼼수통치 중단! 법적근거 마련!

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을 통해 경찰을 통제하고 위법한 인사검증이 이루어지는 시행령 꼼수통치를 중단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발굴.

-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여 위법한 경찰국 신설을 통제(임호선 의원, 22년 7월 15일) 하고, 인사혁신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두어 인사정보관리업무를 법무부에서 인사혁신처로 되돌림(이성만 의원, 2023년 2월 28일 발의)

민주당은 그동안 “정부조직법 관련 3+3협의체”를 통하여 윤석열 정부의 위법한 시행령 통치 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한 발도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일부 정부조직개편만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법적근거가 없는 정부조직을 통하여 경찰을 통제하고 위법한 인사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며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제정한 법에 근거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위법한 시행령 통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경찰위원회 실질화’ 및 ‘인사정보관리업무 정상화’ 입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①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윤석열 정부는 법적근거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통하여 행안부 산하 경찰국을 신설하여 경찰에 대한 인사 및 정책수립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언제든지 치안사무 등을 포함한 경찰의 수사와 행정에도 행안부 장관의 통제가 가능하여 정치적 개입우려가 존재한다. 경찰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을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며 경찰이 그동안 쌓아올린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과거 경찰의 독립과 함께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마련된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자 한다. 현재 경찰을 통제하는 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자문위원회에

불과하지만 향후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사무를 추진하고 다양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② 인사정보관리업무 정상화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관장사무는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 일 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정보관리업무는 법무부의 업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인사정보관리업무를 법무부에 적법하게 위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정보관리업무의 법무부 위탁은 행정각부에 불과한 법무부가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에 개입할 수 있게 되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공무원의 인사정보관리업무를 대통령 다음의 상급행정기관인 국무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에 둔 입법 취지도 훼손하였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을 통해 인사정보관리업무를 인사혁신처로 되돌리는 ‘인사정보관리업무 정상화’를 실시하려고 한다. 인사정보관리업무를 “검찰”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에 둔다면, 수사와 정보기능이 섞일 가능성이 높아 인사정보가 수사 등 사정업무에 오남용 될 위험성이 너무 크다. 현재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국회에 조차 업무현황이 보고되지 않는 감감이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위험성을 확인조차 할 수 없다.

“경찰위원회 실질화” 법안은 임호선 의원이 지난 해 7월 발의하였고, “인사정보관리업무 정상화” 법안은 오늘 이성만 의원이 발의하여 향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아무쪼록 정부는 국회를 우회해 행정입법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시행령 꼼수통치를 중단하고, 정당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바란다.

2023. 2. 28.



참고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임호선의의원 안)

구 분	현 행	임호선의의원 개정안 주요내용	필요성
설치 및 법적 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안전부 소속 자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경찰청은 경찰위원회 소속) 정부조직법(2116480)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위원회의 자문위원회역 할 수행은 실질적 권한 약화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경찰청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
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7명 (위원장 1, 상임위원 1) 전원 대통령 임명 위원장 비상임, 상임위원 정무직공무원(차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9명(위원장 1, 상임위원 2) - 대통령임명 (국회 지명6, 대통령 지명3) 위원장 장관급, 상임위원 차관급 위원장 국무회의 출석 및 발언 경찰위원회 산하 사무기구 설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2116481)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위원회 인원구성을 대통령만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참여하여 다양성과 견제장치 확보 사무기구 마련으로 독립적 사무 추진
인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경급 이상 승진 인사권) - 경찰청장 추천→ 행안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 대통령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경급 이상 승진 인사권) - 행안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인사제청권한을 경찰위원회가 행사하도록 함 경찰공무원법(2116732)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안부장관이 인사제청권으로 경찰을 통제하는 문제점 시정 민주적통제기관인 경찰위원회를 통하여 투명성 및 독립성 확보

참고

인사정보관리업무 정상화 방안 (이성만의의원 안)

구 분	현 행	이성만의의원 개정안 주요내용	필요성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근거규정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혁신처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 인사정보관리단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 관리업무 담당 - 국가공무원법 19조의3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에 존재할 경우, 인사정보가 사정업무에 오남용될 위험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관장사무를 넘어서는 부분 정상화